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박 영 자 |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을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장에서는 복잡계 이론과 분석 개념 및 방법을 다루었다. III장에서는 북한 경제시스템에 시장질서가 착근하게 된 자기조직화 I국면을 다루었다. 1990~2000년 기간인 이 시기 대표적 복잡계 현상은 사회엔트로피, 창발, 풀개이다. IV장에서는 시장이 발전하여 북한 경제시스템의 한 축으로 작동하게 된 자기조직화 II국면을 다루었다. 2000~2007년 기간 긍정피드백, 위계, 프랙탈이 주요 복잡계 현상으로 드러났다. V장에서는 계획주체에 의해 시장시스템이 충격을 받다 회복기로 접어든 자기조직화 III국면을 다루었다. 2007~2010년 현재까지인 이 시기 시장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부정피드백이 공격적으로 작용하다, 경제시스템의 비평형성이 두드러짐을 규명하였다. 한편 이들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나타난 복잡계 현상들은 공존하거나, 질서와 무질서의 동시적 양상으로 혼재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등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즉, 시간적 순서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동시성과 중첩성을 갖는다.

주제어: 북한 경제시스템, 복잡계, 행위자기반모형, 계획과 시장의 이중경제, 자기조직화 경로

I. 서론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과 '변화'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학술적 연구 뿐 아니라 정책적 연구 또한 상당함에도, 갈수록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하는 북한 시스템(system)¹⁾을 새로운 이론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27-B00025).

1995~2010년 현재까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북한 체제 내부의 자원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고질적인 비효율성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실증자료와 증언들이 무수함에도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와 위로부터의 계획경제가 갈등, 타협, 공존하면서도 여전히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고 조율하고 있는 북한 체제는, 기존 사회과학 이론의 뉴턴 물리학에 기반한 균형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과학에서 복잡성 관련 저술의 기원은 수백 년 전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76)의 국부론으로 평가된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란 개념을 통해 시장과 시장시스템이 단일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구조를 통해 필요를 가진 여러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작동한다는 복잡계의 시각을 견지하였다(John H. Miller and Scott E. Page 2007, 4). 이렇듯 복잡계 이론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실한 사회과학의 소재는 시장과 시장체계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과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으로부터 학제간 연구로 발전한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을 활용해서,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을 규명하려 한다. 불확실성과 예측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북한 경제체계의 현실을 주목하고, 무질서와 질서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며 서로의 존립 근거가 된다는 복잡계의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개념에 착목한 것이다. 인과론적이고 단선적인 균형 이론으로 북한 경제체계의 복잡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잡계 이론의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 체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계도로서 북한의 시장을 주목한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욕구증대와 위로부터의 통제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내는, 북한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북한 정치경제 관련 최근 주요 연구성과들(양문수 2005; 이영훈 2005; 차문석 2007; 조정아 외 2008; 최진욱 외 2008; 김병연 2009; 박영자 2009; 이석 외 2009; 임강택 외 2009; 박형중 외 2009; 한기범 2009; 정은이 2010; 임수호 2010; 권영경 2010; 양문수 2010; 이정철 2010),

1) 시스템은 흔히 체계로 번역되는 데, 다양성을 지닌 물질적 조직·기구·사물·과정 등(물질체계)이나 의식·개념·명제 등(관념체계)이 일정한 조직원리에 따라 질서 지어진 것으로, 특정한 방식이나 양식으로 서로 결합된 부분들의 총체를 말한다(브리태니커 2010). 한편 한국의 북한연구에서는 정권을 의미하는 레짐(regime)과 시스템(system)을 대개 ‘체계’로 번역하며 혼용 사용하고 있다.

좋은벗들 및 임진강 출판사 현장 보고 자료들(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6년~2010년 현재 각호; 임진강 출판사 임진강, 2007년~2010년 현재 각 호), 최근 탈북자 증언들이며, 분석시기는 내용적으로 1980년대의 암시장 확산 현상을 포괄하되, 모멘텀(momentum)으로서 코메콘(COMECON)²⁾ 붕괴와 화폐개혁 실패가 드러난 1990년을 기점으로 2010년 현재까지 20년 과정이다.

II. 복잡계 이론과 방법

1. 이론과 개념

공간을 가로지르는 지구화 및 지역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민족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생활의 행위/양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 현상을 복잡계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초래되는 혼란과 무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의 총체적 방법론인 복잡계 이론이 출발하였다. 기실 우리 주변 환경의 복잡성은 선형적 인과론에 기초를 둔 뉴턴적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복잡성과 상호연결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최창현 2006, 385).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복잡한 시스템 내부의 일정한 패턴을 규명하려는 것이 복잡계 연구의 주된 관심이다.

그렇다면 복잡계 연구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국내학자로 정명호·장승권(1997)은 창발성(emergence), 전체성(wholeness),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 비선형성(far-from-equilibrium), 비평형성(non-linearity), 패러독스(paradox), 피드백(feedback) 개념을 복잡계의 주요 분석개념으로 제시했고, 최창현(1999)은 비선형역학시스템(non-linear dynamics system), 피드백, 초기조건 민감성, 창조적 파괴 등을, 김용운(1999)은 카오스, 프랙탈(fractal),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록인(lock-in), 창발 등을, 김창욱(2009)은 자기조직화와 진화(evolution)를 복잡계의 주요 개념적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1984년 이래 융합

2) 사회주의 경제상호원조회의인 코메콘은 1949년 1월 회원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1991년 6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브리태니커 2010).

학문으로서 복잡계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산타페연구소(The Santa Fe Institute, SFI)³⁾와 대표적 학자인 가르시아(Garcia 1997)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특성을 창발, 위계/계층성(hierarchy), 자기유사성, 피드백, 끌개(attractor)등으로 개념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 이론의 주요 개념 중 자기조직화 경로(the path of self-organization)를 기본 축으로 하여, 사회엔트로피(social entropy), 창발, 끌개, 위계, 긍정피드백, 부정피드백, 프랙탈, 비평형성을 사용하여, 북한 시장질서 20년의 역사적 경로를 복잡계 현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기조직화 개념은 정보처리계가 처리기능을 높이기 위해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둔 기억과 외부로부터의 정보입력을 기초로 하여, 자발적으로 시스템 내 조직을 개조/변경시켜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나, 조직이나 체계가 중심 주제일 경우 자기조직화로 명명하고, 처리기능이 주일 경우를 학습이라 칭하곤 한다. 이러한 공학의 연구성과를 받아 안은 복잡계 이론에서 자기조직화를 간략히 정의하면, “한 시스템 내부에서 유인과 반발 작용의 과정(a process of attraction and repulsion in which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a system)”, ‘스스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Wikipedia 2010).

자기조직화 현상은 인위적인 설계나 관리 없이도 스스로 질서지우는 복잡계의 특성으로 자기조직화의 관점에서 보면 질서는 외생적/내생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다. 중앙집권적 지시보다는 상호조정과 자기규제로부터 질서가 창출되며,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으로 형성”된다. 자율적 행위자들의 행동은 분권적 방식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분산적이라고도 기술한다. 이것은 단지 한 시스템이 개별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개체가 소유하지 않는 특성을 갖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최창현 2006, 398).

엔트로피(entropy) 개념은 열역학에서 기원하는데 가장 단순한 정의는 ‘무질서’이다. 물리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개념은 “어떤 물리계 내에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 엔트로피의 양은 그 체계의 무질서 정도를 나타낸다(브리태니커 2010). 엔트로피 이론에 따르면 닫힌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 양이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그 체계는 열 죽음(heat death) 상태로 나아간다. 그런데 생명체가 환경과 적

3)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Santa Fe, New Mexico)에 위치한 비영리연구소로 1984년에 설립되어 복잡계연구의 메카로 활동하고 있다(Wikipedia 2010).

응 및 진화하고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무질서 한 상태에서도 협력관계가 형성되거나, 특정한 질서 양상이 새롭게 창발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프리고진(Prigogine 1989)이 제기한 “혼돈으로부터의 질서”이다. 이 연구성과를 현실사회에 적용한 것이 사회엔트로피(social entropy) 이론이다. 사회엔트로피 개념은 베일리(Kenneth D. Bailey 1996)가 권력 구조와 갈등의 복잡성이 만들어 낸 사회의 불평등성과 무질서 속에서도 체계가 유지되는 일정한 패턴을 주목하며 이론화하였다.

창발은 진화론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전 상태로부터 예측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체계가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브리태니커 2010).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 구성요소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시스템 차원에서 드러나는 것을 지칭한다. 특히 창발성 개념이 시사하는 바는 자기조직화가 체계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으며, 체계 자체 내에서 기능하는 내재적인 것이라는 점이다(최창현 2006, 398). 끝내는 역동적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혼돈 속의 질서’ 상태로 카오스 이론의 업적 중 하나이다(Wikipedia 2010). 위계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가 다른 요소에 종속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이나 제도들이 서열을 가지고 조직·운영되는 현상이다. 즉 서열화된 집단과 사회로 이루어진 체계의 복잡한 특징을 지칭한다.

복잡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인 피드백고리(feedback loop, 순환고리과정)는 원인과 결과 간 관계를 순환적인 상호인과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피드백은 복잡계에서 자기조직화의 원동력이 질서와 안정을 초래하는 부정피드백(negative feedback)과 무질서와 변화를 초래하는 긍정피드백(positive feedback)의 상호보완적 작용을 통해서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생존을 유지하고 변화 가능한 체계는 이 두 피드백이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이다(Parker and Stacey 1994). 부정피드백은 편차를 상쇄시켜줌으로써 체계의 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며, 긍정피드백은 나비효과라 불리는 초기조건에 따른 체계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특성이다.

대부분의 변화들은 부정피드백에 의해 쇠퇴되어가지만, 어떤 변화는 우연히 증폭되어 그 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새로운 체계가 창발되도록 작용한다. 체계 전체는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Jantsch 1980). 2010년 현재까지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북한 경제시스템은 ‘위로부터의 시장 조율 및 통제’와 시장발전의 기초인 ‘아래로부터의 필요(need)에 의한 시장 확산’이 공존하며, 공격과 반격의 큰 틀 내에서 다양한 조율, 협력, 갈등 양상이 드러난다.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긍정피드백은 대개 시장 확산/강화 작용을 하고, 부정피드백은 시장 억제/약화 작용을 한다.

자기유사성⁴⁾이라고도 불리는 프랙탈은 부분이 전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자기닮음' 현상을 말한다(김용운 1997, 80).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이 유사한 특성이나 공통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애초 프랙탈(fractal)은 철저히 "조각난" 도형을 뜻하는 것으로, 그 개념은 수학자 브누아 만델브로(Benoît B. Mandelbrot)가 만들었다.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부분 안에 전체의 모습을 갖는 무한단계에서의 기하학적 도형을 뜻하는 것이다. 이 도형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닮음성과 무한히 확대를 해도 도형의 세부적 성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Wikipedia 2010). 한편 심광현(2005, 29)은 끊임없이 주름 접기와 퍼기를 반복하면서 자기 복제를 수행하는 비정형적 자기조직화 과정이 바로 프랙탈한 것이고 정의한다.

비평형성은 어떤 체계가 질서 있고 안정적인 평형(equilibrium) 상태에서 벗어나,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나아가는 정도를 개념화한 것이다. 복잡계의 자생적 질서는 평형상태나 평형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형상태에서는 시스템의 요동이 상쇄되어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수 있는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형 상태에서만 분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가 형성되고 새로운 구조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⁵⁾

자기조직화, 사회엔트로피, 창발, 끝개, 위계, 긍정피드백, 부정피드백, 프랙탈, 비평형성 등 각각의 개념들은 고유한 복잡계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개념설명에서 확인했듯이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개념들이다. 따라서 이 개념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현실은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복잡계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2. 분석 방법

시장(Market)과 시장경제(Market economy), 그리고 시장체계(Market system)는 동의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모든 거래의 장소를 시장(Marketplace)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비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시장경제라 한다(브리태니커

4) Self-similarity is a typical property of fractals(Wikipedia 2010).

5) 분산구조란 체계의 하위요소들이 새로운 구조 창출에 필요한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유입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엔트로피(무질서)를 환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Prigogine and Stengers 1984).

2010). 한편 시장체제는 중앙집권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인간활동을 조율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그 유형도 노동시장, 농산물 시장, 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 다른 생산자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취급하는 중간재시장,⁶⁾ 자본시장⁷⁾ 등으로 다양하다(Lindblom 2009, 15-17).

2010년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위로부터의 계획경제와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 중앙의 통제/규율 및 지역의 조율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시스템의 제도화 수준이 상당히 낮으며, 구체적 정보/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으로서 시장을 중심으로 그 시장을 매개로 한 행위자들의 시장경제 활동양태들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복잡계의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s, ABM)에 기초해 연구하려 한다.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복잡계 연구의 가장 강력한 도구(tools)는 컴퓨터를 활용한 계량기술(a set of computational techniques)이다(Miller and Page 2007, 5). 그리고 주요 연구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현실 복제와 가상의 실험이다.⁸⁾

시뮬레이션 모형과 관련하여 정치학에서는 특히 국제정치학에서 대규모 글로벌 시뮬레이션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과거 시뮬레이션에서는 수많은 변수들과 작동규칙들을 컴퓨터에 코드화하여 메인프레임에서 처리함으로써 미래세계의 모습을 예측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예측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복잡성은 변수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규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식하지

-
- 6) 컴퓨터 조립업체에 판매되는 컴퓨터 부품같은 중간 재화를 다루는 시장.
 7) 대부시장과 증권시장 및 여러 유형의 투자시장. 대개 자본주의에서 중간재시장과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가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이다.
 8) 복잡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가능하다. 첫째, 변수 기반 모형(variable-based model)이다. 기본 구성요소가 시스템 변수인 모형으로 시스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전체적 행태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이다. 기본 구성요소가 행위자인 모형으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그들의 총합인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어떠한 동태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서는 시스템 변수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시스템 내 행위자들의 분포의 변화, 이들 간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등 시스템의 진화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김창욱 외 2006, 564-565).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수많은 변수를 포함시켜도 나비효과로 인해 미래의 모습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성과로 “대강의 질서, 즉 패턴을 찾아내는데 모델의 주안점을 둔다”면, 변수의 수보다는 변수들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의 법칙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민병원 2006, 216).

그리하여 ‘행위자 패턴의 규명’과 ‘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례분석이나 역사적 접근방식 등의 질적 연구로도 복잡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시도와 연구성과물들이 보고되고 있다.⁹⁾ 특히 북한 시장은 데이터 부족과 낮은 제도화 수준, 비공식적 행위와 상호작용 활성화 등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기에는 기초 정보량이 상당히 부족하다.¹⁰⁾ 이 같은 북한 시장 및 연구 상황을 중시하는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시한 사고실험을 수행한다. 오피스 행위자 기반모형(office Agent-based model, ABM)이라고 불리는 복잡계 연구방법의 1단계 방법론이다. 넷로고(Netlogo) 등을 활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행위자·환경·이들 간 상호작용의 존재를 인식하고, 역사적 맥락에 따른 사고실험으로 복잡계 현상을 추론하는 것이다.

1980년대 농민시장 및 암시장의 확산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아래로부터의 북한 시장경제는 2010년 현재까지, 시장의 확산, 시장주체의 발전, 식량배급의 불안정성, 정권의 시장 규율 및 통제, 시장주체의 직간접적·공식·비공식적 저항 등과 맞물리며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주요 행위자로 아래로부터의 시장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활성화 주체들과 위로부터 시장활동을 규율/통제하는 시장규율화 주체들을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를 단순화하여 ‘시장활성화를 주도하는 행위자를 시장주체’라 하고, ‘시장규율화를 주도하는 행위자를 계획주체’라 개념정의한다.

그리고 이들 시장주체와 계획주체의 작용과 반작용,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경제 체제인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을,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에 따라 분석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어떤 조건에서 자기조직화가 발생하는가이다. 복잡계 이론에서 자기조직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시스템

9) 한국에서의 대표적 성과물은 이광모 외(2004); 민병원(2006) 등이다.

10)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할 순 있으나, 단독연구로 이를 구체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후속연구 과제로 상정하고자 한다.

내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두 번째 조건은 구성요소/행위자의 행위 또는 행태들 사이에 긍정피드백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도 또는 일탈 행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자기조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선별과정이라면 그것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의 내부적 침식과정으로, 이는 시스템 정합성의 제고(提高)와 감소를 초래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새로운 자기조직화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김창욱 2009, 51-52).

본문에서는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시장이 착근하고 발전하며, 하락하다가 회복에 들어선 1990~2010년 현재까지의 복잡계 현상을 자기조직화의 역사적 경로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연구가설은 북한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는 사회엔트로피, 창발, 끌개, 위계, 긍정피드백, 부정피드백, 프랙탈, 비평형성 등의 복잡계 양상을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 장과 절에서는 각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복잡계 현상을 복잡계 이론의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복잡계 현상들을 시기별 분석 개념에 활용한 것은, 학술적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로 이용하기 위함일 뿐이다. 현실에서 각각의 현상들은 공존·혼재·동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서로에게 작용과 반작용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III. 시장 착근: 자기조직화 I국면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시장의 맹아적 질서가 나타난 것은 8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시스템에 계획이 아닌 시장경제가 착근된 시기는 1990~2000년 기간이다. 이 시기를 북한 시장의 자기조직화 I국면(局面)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1990~94년 암시장 확산기에 사회적 무질서 양상인 사회엔트로피가 증대하여 북한 시장의 자기조직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어 1995~97년 기아와 배급제 등 국가 공적 부조의 붕괴로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시장질서가 창발되었다. 이 시기 배급제 붕괴로 암시장이 전면화되면서 방임형 시장이 형성되어, 무질서한 생존형 시장경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1998년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시장을 정비하던 2000년까지가 북한 경제시스템에 계획과 시장 질서가 상호작용하며, 혼돈 속의 질서로서 시장과 계획의 이중경제가 형성되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10여 년의 시기를 북한 경제시스템에 시장의 착근기인 자기조직화 I국면이

라 칭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자기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위로부터의 계획 경제와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가 북한 경제시스템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던 1998년~2000년 기간이다. 이 시기는 김정일이 공식적 절대권력자로 체제질서를 구축하던 시기로 국가의 시장 정비기이다. 이때 북한주민 및 하층단위에 자력갱생을 요구하던 북한정권은 암시장을 벗어난 '시장'을 논하게 되고, 소비품 수준에서 상품과 가격 원리를 부분 인정하였으며, 군수 및 당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계획과 시장 경제의 공존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엔트로피 증대, 창발, 끝개 등의 복잡계 현상이 나타나고 북한의 시장주체가 형성되었다.

1. 암시장 확산기(1990~1994): 사회엔트로피 증대

북한의 시장은 전통적으로 지속된 '농촌시장'으로부터 출발하여, 1958년 전 산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위축되어 '농민시장'으로 재구성되었다. 농민시장은 협동농장의 공동 경리와 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고파는 상업의 공간으로, 2010년 현재까지도 북한정권이 공인하는 합법적인 '사회주의적 상업'의 한 형태이다.

북한경제의 위기 징후가 드러나고 국경지역부터 배급제가 불안정하게 운영되면서 북한의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가 붕괴되어, 수출입 통로가 막히며 물품공급에 타격이 심해지면서, 농민시장에 공업물품이 조금씩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농민시장이 암시장 형태로 발전하였고, 북한 시장 형성의 자생적 통로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위기로 인해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용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가내작업반이나 가내부업 등의 소생산자 확대와 북중 간 국경지대의 변경무역 전개는 북한에 불법적인 '암거래' 확장과 공업품판매를 촉진하였다. 북한 도시주민들 사이에 '장마당'이라 불리던 '암시장'이 확산되게 한 것이다. 이 시기 농민시장과 암시장, 장마당이 혼재되며 북한 계획경제 시스템 내 균열이 생기고 무질서가 확대되었다. 즉, 사회엔트로피가 증대한 것이다.

2. 자생적 시장 형성기(1995~1997): 창발

이 시기 북한 계획경제 시스템의 근간인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농민시장과 혼재되어 있던 암시장이 전면화되었다. 계획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아래로부터 새로운 질서, 시장질서가 나타나는 창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가 '고난의 행군기'라 불리는 북한 계획경제 시스템의 쇼크(shock)기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하나의 일련의 공급체제라면 그 공급체제의 흐름이 완전히 마비상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죠. 시장이 많이 생겨나고 그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돌았죠.”¹¹⁾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주민의 절대적 생존위기 상황에서, 북한 계획경제 시스템은 정체되었고, 북한당국은 급기야 '스스로 생존하라'는 '자력갱생'을 지시하였다. 자력갱생이라는 비계획적인 경제생활 지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북한에 '합법과 불법이 공존하는 시장'이 창발된다.

농민시장에서 합법과 불법이 뒤엉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적 생산물인 텃밭생산 농산물, 개인부업 농축산물, 협동농장 부업생산 농축산물은 공급원천과 농민시장 유통 둘다에서 합법적이었다. 한편 개인부업 식료품/생필품은 공급원천은 합법이나 유통은 불법이었고, 개인의 불법 경작지 생산농산물 및 불법적 가축사육은 공급원천과 유통 둘다 불법이었다. 그리고 농장을 포함한 기업차원의 생산물 중 기업에 의한 공식부문 생산 식량과 공산품은 합법적으로 공급되나 유통은 불법이고, 개인에 의한 공식부문 생산물의 절취·식량유통, 생필품·원자재는 공급원천과 유통부문에서 둘다 불법이었다. 그리고 중국 등 제3국 유입품 중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은 공급원천에선 합법이지만 유통은 불법이었고, 개인 및 기관에 의한 밀수품과 국제사회의 지원물자에 대한 개인·기관에 의한 절취/유통은 둘다 불법이었다(양문수 2005, 9-10).

북한식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도의 붕괴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계획과 배급을 우회하

11) 한○○. 40대 남성. 함북 청진시, 청년동맹 지도원 출신, 2006년 탈북.

여, 시장이 만들어내는 가격질서에 따라 거래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기형적인 시장경제를 창출하였다. 경제위기와 자연재해에 의해 식량배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생산재 공급 역시 크게 타격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경제행위 주체들은 식량을 획득하고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적이며 직접적인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제주체들의 필요(needs)가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가격을 매개로 한 자원배분인 시장경제를 창출한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한 하층 간부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살펴보자.

“배급을 주겠지 주겠지 했는데 6개월을 가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벌어야 되겠다. 장마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장으로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뭐하라고 하면 먹어야 일할게 아닌가. 아래서는 다 의견들이 있는 거죠. 나도 이제 아줌마들 데리고 남촌동으로 나가면 거기 분대장 보고 먹어야 일할 게 아닌가. 사람 일주일에 하루씩 쉬라면 난 무조건 하루에 4명씩 쉬웠거든요. 대신 말하죠. 저 4명 몫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면 너네 장사하겠음 해라 맘대로 해라. 반장들이 그 시기에는 자기 사람들 매일매일 안 나오는 거 체크 했는데. 죽지 않는가, 죽는 게 바보다. 별 지랄을 해서라도 살아라. 이게 당시 반장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죽이지 말자.”¹²⁾

이 시기 북한당국은 주민과 중하층 경제주체들의 자생적 시장활동을, 한편으로는 용인하면서도 법·제도적 정비작업은 하지 않았다. 시장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식적 제도와 경제주체들 간 행위 양식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공식제도는 계획경제였으나 경제주체들이 생존을 위해 공공연히 시장경제 활동을 하였다. 시장거래가 공식적으로는 대부분 불법이었지만, 공식제도를 운영하는 통제·관리·감독기관 등으로부터는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의 거래행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지만, 시장경제가 제도화되거나 체계화되지는 못하였다. 효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무질서하면서도 기형적인 시장경제가 발전해 갔다. 전국적 단일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거래의 여지가 많았으며, 기업 간 거래는 화폐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물물교환이 주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제한적이고 퇴행적인 시장경제가 창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식량 등 농산물 중심에서 거의 모든 소비재까지로 거래품목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생산재와 공기업에서 생산된 상당수 제품들도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다. 이 시기 북한 경제시스템에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질

12) 이○○. 50대 여성. 함북 경성, 공장 반장 출신. 1998년 탈북.

서로 시장경제가 창출되었다.

3. 국가의 시장정비기(1998~2000): 끝개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등장 이후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 압력과 김정일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농민시장’이 ‘시장’으로 전환 명명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 북한에서 시장은 암시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소비품 수준에서 상품과 가격 원리를 북한 계획주체들이 부분 인정하였으며, 계획(군수·당 경제)과 시장(주민·사경제) 시스템의 공존이 모색되었다.

북한의 시장 발전을 촉진한 돈주, 도매상인, 소매상인, 무역회사, 가내작업반을 중심으로 한 소생산자들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장주체들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 북한 경제시스템은 계획과 시장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였고, 이러한 혼돈 속에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 경제로서 ‘혼돈 속의 질서’, 즉 끝개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 시기 북한의 ‘자기조직화 I국면’이 왕성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으로 과거 농민시장 판매주체는 협동농장과 농민이고, 소비주체는 개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시장이 북한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공간이 되면서 다양한 시장주체들이 위계질서를 가지고 시장경제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부터 비공식적인 ‘유령회사’로 일정한 소속 없이 외화벌이를 하던 단위들이 무역회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들 무역회사 뿐 아니라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이 자체 자금으로 생산/구입한 물건을 시장에서 처리하였다.

그리고 90년대 말에 이르러선 기업형태의 무역회사 이외에도 돈주, 도매상인, 소매상인 등 시장주체가 형성되고, 이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 경제시스템에 시장이 착근하는 자기조직화 I국면이 펼쳐졌다. 당시 생생한 상황을 한 탈북자는 “기아의 역동”과 “생을 위한 부단한 전진과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역동성이 있는데, 북한에 기아가 났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굶어죽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에 대항하는 반대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주책이라고 하면 인테리어나 내부 세부 구조, 가구 이런 것들이 한심했는데, 굶어 죽어 나가면서도 반대로 집들은 번듯해지고 가정 집기들이 너무 있어진 거죠. 예전에는 집에 이불장 하나 이 정도지만 이제는 전실에 레자를 깔고, 그것도 고급레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하는 내부적인 역동성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회라는 것이 그런 거죠. TV했다고 하는데, 예전 95년도 초기에 천연색 TV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 40% 정도라고 할까. 그런

데 고난의 행군 끝난 그 말경에 가서는 거의 다 모든 집이 80~90% 정도가 색 TV, TV를 갖고 있는 거지요. 죽은 사람들 TV가 풀리다 보니까 다 가졌냐, 그건 아니구요. 사람은 끊임 없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아침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 밤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죽는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더 잘 살아야겠고, 이것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생을 위한 끊임없는 부단한 전진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¹³⁾

IV. 시장 발전: 자기조직화 II국면

이 시기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며 자생적으로 확장되던 시장경제와 북한의 시장주체들이 정권의 시장경제 부분 제도와 조치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하였다. 북한 경제시스템 운영에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와 함께 한 축을 이루며 본격적으로 발전한 '자기조직화 II국면'이 전개되었다. 아래로부터 시장의 확산 및 자기조직화와 함께 위로부터의 부분 개혁조치가 맞물리면서, 전체로서 북한 경제시스템에 시장시스템이 한 축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장시스템과 계획시스템이 공존하며 동시 작동하는 이중경제시스템이 형성되었다. 한편 시장경제가 계획경제 내로 깊숙이 스며들면서 경제시스템의 무질서가 고조되었다. 더불어 2005~2007년 북한정권이 시장을 매개로 확장되는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시장주체와 시장시스템에 대한 계획시스템으로의 인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계획주체의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며 무력화되곤 하였다.

탈북자 다수도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체계화되어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자기조직화된 시기로 2000년 이후를 지목한다. 2000~2005년은 북한정권이 시장주체를 활용하여 계획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 일부를 제도 내로 포섭하려던 시기로, 긍정피드백이 활성화되고 전체로서 북한 시스템 내에 위계성이 명확해진 시기이다.

2005~2007년 시기는 2002년과 2003년 정권에 의해 추진된 부분개혁 조치의 효과와 이로 인한 계획경제 시스템의 침식이 드러내며 계획주체들이 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새롭게 창발된 시장경제가 주민생활 뿐 아니라 계획시스템 내부로까지 침투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자기유사성을 갖추며 전체로서 북한 경제시스템이 상품거래의

13) 김○○. 50대 남성. 함남 함흥시, 대학교원 출신. 2003년 탈북.

프랙탈 현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중앙 계획주체들의 시장통제는 시장주체에 의해 무력화되곤 하였다.

1. 시장 확산 및 포섭기(2000~2005): 긍정피드백과 위계

2000년 10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시장친화적 개혁조치를 계획할 수 있는 연구조직이 신설되었다. 이 연구소는 경제개혁 관련 발상의 전환을 김정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한다. 당시 북한정권은 1950~60년대 탈스탈린주의 조류, 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80년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변화의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보았다. 그리고 2000년에 시작된 산업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했다. 또한 북한 경제시스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 입안이 본격화되어, 2001년부터 시장친화적인 경제시스템 개혁조치들이 하달되었다(한기범 2009, 80-133).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을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 지속하되, 아래로부터 자기조직화하던 시장경제를 주민 및 중하층 관료들의 생존과 국가의존성으로부터의 독립차원에서 부분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주민생존 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인민경제 지원비용을 군수 및 당 경제에 이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소위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과 상품거래 원리를 북한 경제시스템 내부로 인입하는 부분개혁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상징적 모멘텀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 실시이다. 7·1 조치로 부분적이지만 시장시스템을 공식적 제도의 영역으로 포섭하려 하였다. 2003년 종합시장제로 시장을 조율하는 법 및 규정을 제정하고, 물자교류 시장을 허용하는 등 시장의 제도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분기점으로 북한의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였다.

기실 7·1 조치는 계획경제 시스템 내에 실리주의를 결합시키자는 정권의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에 따라 생산물을 가치대로 계산해야 실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상품가격과 임금(생활비)을 현실화한 것이며, 둘째, 공장·기업소 사업평가의 기준을 과거의 현물계획에서 현금(돈)계획도 인정해준 것이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독립채산제를 구체화하고, 생산단위 평가를 소위 '변 수입에 의한 평가' 정책에 따라 실리/실적 위주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셋째, '일할 만큼 번만큼 분배' 한다는 성과분배 원칙으로 임금에 차등과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추진한 것이다.

정권차원에서 7·1 조치의 실질 목적은 첫째, 국가계획 부문과 아래로부터 성장한 시장 경제 부문 간 갈수록 확장된 가격격차를 줄이고, 둘째, 국가차원의 노동력과 재화의 유출을 막으며, 셋째, 가격구조를 개혁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넷째, 국가보조금 등 정권차원의 중앙재정 부담을 줄여, 최종적으로 고질적인 상품공급 부족상황에서 가격구조 변화와 임금인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국가 경제시스템을 벗어나고 있는 시장경제를 국가 통제권 내부로 인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산과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시장주체들 뿐 아니라 중하층 계획주체들에게도, 이제 국가도 자본주의적인 것을 승인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다수 북한주민에게 비사회주의적 의식이라고 칭해지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탈집단주의 의식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계획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신념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탈북자는 “그때가 기본 그렇게 달라졌다”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경제관리체계가 나오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인 이런 것을 국가 자체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기업관리체계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개인관리 체계처럼, 실제로는 기업관리면서도 개인관리처럼. 어떤 식인가하면 내가 쌀을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옛날에는 농장도 협동식으로 해서 농장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외화벌이 기업소라고 하면 우리 외화벌이 기업소에 농장의 땅을 떼어 줬어요. 떼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분배 식으로 배급을 주지만 그게 국가의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사회주의체계와는 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법관들이라면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는 넘기게끔 변화가 있었던 말이에요.”¹⁴⁾

이어 북한당국은 2003년 5월 5일자 내각결정 27호 의해 ‘시장관리운영규정’을 하달하였다. 핵심내용으로 첫째, 시장의 설치와 폐지는 상업성이 승인하고, 둘째, 시장 관리책임은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며, 셋째, 한도가격을 설정해 그 범위 내에서 거래하고, 넷째, 점포 면적·위치에 따라 시장이용료를 국가에 납부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북한 경제 시스템에 시장시스템이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인정한 제도가 종합시장제이다. 종합 시장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설하고 상업관리소에서 분리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는

14) 장○○. 40대 여성. 평양-무산-함흥-청진을 다니며 원유 차판 장사. 2007년 탈북.

데, 전국적으로 300여 개에 이른다.

종합시장제 실시 이후 북한당국은 시장관리소를 '시장사용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납부하게 하는 독립적인 국영기업소로 격상시켰다. 시장관리소는 첫째, 원칙적으로 10일에 한 번씩 쌀·기름을 비롯한 중요상품의 최고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시장입구 게시판에 고시하고, 둘째,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국영기업소·협동단체로부터 일정액의 시장사용료 외에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징수하였다. 1일장으로 운영하되 원유·생고무를 비롯한 전략물자와 생산수단 등 국가적으로 매매가 금지된 제품을 제외한 국내생산물과 수입상품 등 매매품목이 확대되었다. 주민들은 물론 국영기업소·협동단체도 시장판매에 참여하며, 판매물품은 식료품에서 수입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이다.

일반주민들은 시·군·구역 별 상업국으로부터 매대를 임대해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고,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뿐 아니라 기업소 간 상품거래도 허용하였다. 과거 농민시장에서는 기업이 시장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종합시장 개편으로 기관·기업소 등도 공급과 수요, 판매와 소비의 주체로 등장했다. 종합시장의 매대를 임대하여 생산물 판매를 허용하고, 계획 외 생산에 필요한 원료구입이 시장을 통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상품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북한 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매매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 상품가격은 쌀 가격으로 시장의 수요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시장을 매개로 시장주체와 계획주체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수록 쌀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을 풀어줄수록 쌀 가격이 떨어지는 연계양상이 일반화되었다.

북한당국이 종합시장제를 실시한 목적은 첫째, 시장에 많은 상품이 거래되게 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둘째, 기업관리 측면에선 기업의 시장 직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상품의 품질개선이나 가격의 합리적 제정 및 경영자금을 확보하게 하고, 셋째, 지방 예산 수입 확충 차원에서 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을 활용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북한 경제시스템 작동의 한 축이 된 시장시스템을 계획시스템 내부로 인입할 순 없었다.

이 시기 시장주체들의 경제행위들이 비법(비사회주의법)영역에서 합법영역으로 크게 이전했으며,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행위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하였다. 종합시장 뿐 아니라 골목시장·메뚜기시장 등 다양한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화폐를 매개로 한 생산재의 거래가 보편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발전하였다.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가내수공업 유형의 생산이

확대되었으며, '돈주'라고 불리는 사적자본이 기업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등 시장시스템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시장시스템 작동은 북한 사회에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 등 출신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의한 계층구조를, 생활수준 및 재산규모에 의한 상류층·중류층·하류층 등 경제적 배경에 의한 위계적 계층 질서로 전환되게 하였다. 재산과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일상생활에서 확연히 구별되었다(조정아 외 2008). 새로운 위계의 창출이다. 주민들 간 시장활동 내 위계에 따른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적 고용의 증대로 인한 자본·임금노동자 관계 및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박영자 2009). 북한의 전통적인 혈연 및 정치적 충성도에 따른 계층구조의 위계가 부(富)와 사회적 자본 보유능력에 따라 재구성되었다.

이렇듯 부의 규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위계의 주요 요인은 시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이 국영사업장을 대체하고 주민소득 형성의 중심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시장시스템이 아래로부터 시장주체에 의해 현실화되면서, 당국의 간섭과 감시도 강화되었으나 통제 실효성이 계속 떨어졌다. 시장을 통해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데다가, 시장이 지역운영과 중하층 간부들의 수입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시장은 지역단위 구체적 현장에서 중하층 계획주체들이 자신의 이권을 유지 및 강화하는 제도로 기능하였기에, 중앙 계획주체들의 통제력이 아래로부터 침식되었던 것이다. 결국 북한 시장에서 시장주체 뿐 아니라 계획주체들도 중요한 시장시스템의 행위자로 활동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와 권력의 공생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이들이 새로운 북한주민 계층구조의 상위에 자리 잡는 위계가 이루어졌다. 시기적으로 2003~2004년에 북한사회에 소득 및 생활 수준에 따른 위계가 확연히 드러났다(박영자 2009, 165).

이 시기 북한 경제시스템 작동에서 시장주체들과 계획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긍정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져 시스템으로서 시장 발전이 두드러졌다. 계획단위인 공장·기업소 내부로까지 시장시스템의 장점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또한 시장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장주체들이 돈주→도매상인→소매상인→메뚜기상인 등으로, 소득/생활 수준별로 상류층→중류층→하류층으로 위계 양상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기이다.

2. 시장 활성화 억제기(2005~2007): 프랙탈

이 시기에 시장시스템이 계획시스템 내부로까지 진입하면서, 중앙 계획주체가 시장시스

템을 다시 계획시스템 내부로 인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정권이 시장 질서를 매개로 북한 체제 전체로 확산된 '비사회주의 현상'이 만연해진 것에 대한 위기감을 체제위협으로까지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상품경제 허용조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만연된 시장시스템에 대한 계획주체들의 조정 및 조율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시장시스템이 북한의 기초 계획단위인 공장·기업소 생존 및 운영에 깊숙이 개입되었다. 시장질서의 자기유사성인 프랙탈 현상이 장소로서 시장이나 행위자로서 돈주와 상인 등을 넘어서, 계획주체인 관료들과 국가기구 전반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중앙 계획주체의 각종 조치들이 무력화되곤 하였다. 아래로부터 창발되어 체제 전체로 확산된 북한의 시장시스템은 중앙 계획주체의 '실리주의' 목표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계획주체의 활동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북한정권은 계획주체가 시장주체에 의해 밀려나는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시장의 확산과 함께 외부정보가 유입될 뿐 아니라 급속도로 순환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에서 인지되는 다양한 비사회주의 현상, 무질서 현상이 '김일성민족'으로 명명한 권력 체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시장주체도 돈주·중간상인·소매상인 범주에서 더욱 발전하여, 지역을 이동하며 물건을 날라 시장에 넘기는 '달리기꾼'과 '뽀뽀기꾼', 이들을 운송수단과 연계시키는 '몰이꾼', 무역회사와 공모하여 수입상품을 파는 '차관 장사꾼', 이들을 매대와 연결해주는 '거간꾼'과 '홍정꾼', 시장 앞 살림집에서 제품을 파는 '살림집 밀매꾼' 등등으로 발전하였다. 시장 내 한도가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시장 안팎에서 자본주의적인 거래, 돈주들이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품을 대규모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높이는 현상, 무역회사가 수입상품을 전부 받아 되거래 하는 현상, 가짜상품 거래나 한국 등 외제상품을 위조해 판매하는 현상이 급증하였다. 김정일은 한 동안 종합시장 운영상황을 방관하다가 2004년 상반기에 '시장 상품가격을 안정시키라'는 지시를 3회에 걸쳐 내렸고(2004/01/07; 03/10; 06/01), 국영백화점·시군 도매소·상업관리소에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공급을 늘려 계획시스템인 국영상업망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한기범 2009, 134-149). 그러나 현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증명되어, 번번이 중앙 계획주체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은 경제문제에서 사회문제, 그리고 정권을 위협하는 비사회주의의 문제로 변화해갔다. 시장시스템 작동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계획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무력화 양상들이 전체적으로 경제문제→사회문제→정치문제로 진전된 것이다. 2005년 이후 시장시스템이 북한 체제를 이완시키는 문제에 대해, 내각은 경

제문제로 당은 사회문제이자 정치문제로 인지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은 시장시스템의 통제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2005년을 기점으로 북한정권은 한편으론 '비사회주의의 온상인 시장'의 위협성과 또 다른 한편으론 시장이 자기조직화를 통해 위로부터의 통제에 조율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을 저지하려 하였다. 시장시스템의 확장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다양한 규제를 시도한 것이다. 김정일은 2005년 7월 당 계획재정부를 신설하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인 박남기로 하여금 당 계획재정부장을 겸임하게 하였다. 박남기가 당 계획재정부장이 된 이래, 내각 경제부처 인사권을 총리로부터 회수하고, 내각 산하 민경협을 검열하는 등 당을 중심으로 한 계획주체의 권력 복권을 추진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배급제 복귀 시도, 만 40세 이하 장사금지, 공산품 시장판매 금지, 1일장(1일, 11일, 21일 개장)으로 시장 전환 등 시장통제 조치를 취했다. 2006년 개인고용금지 등 노동시장 통제정책, 전국 부동산 실사조사, 2007년 초 지방 단위별 개인 수공업 및 서비스업 일제 실태조사 등이 대표적 조치이다(한기범 2009; 박형중 외 2009).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2007년 초까지 시장시스템으로 제도화 과정을 경유하던, 시장주체와 중하층 계획주체의 행위 및 상호작용에 밀려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중앙 계획주체들의 통제는 아래로부터 시장의 자기조직화 동력에 밀려,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각종 통제조치들이 무력화되곤 한 것이다. 당시 북한 경제시스템에 드러난 대표적 복잡계 현상은 아래로부터 위로, 부분과 전체가 자율적 시장질서를 갖추게 된 자기유사성, 즉 프랙탈 현상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탈북자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통제하는데 사람들이란 것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국가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깐. 그러니까 너무 통제하면 또 그래요. 비밀리에 들어서 그래요.”¹⁵⁾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고 뭐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있으니까 조직생활이라는 것이 무너졌단 말입니다...우린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비서들에게는 또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호주머니에 좀 찢러주죠. 그러다보니 출근도 마구잡이로 되고 그랬죠.”¹⁶⁾

15) 이○○. 40대 여성. 함북 회령, 농민 출신, 2007년 탈북.

16) 전○○. 40대 남성. 함북 청진, 외화벌이 출신, 2006년 탈북.

“우리부터도 무역회사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저 장마당 장사해서 내 돈주머니나 불구면 되지 내가 나라를 위해 일했다가 똑딱하고 하는데(비사회주의에 걸리기도 하는데) 내가 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이런단 말이예요.”¹⁷⁾

자기조직화 I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아래로부터의 창발과 역동적 경제상황의 혼돈 속에서 나타난 시장질서(끌개)가, 자기조직화 II국면에서 시장시스템으로 발전하여 북한 경제시스템 작동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복잡계 현상은 첫째,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 긍정피드백, 둘째, 집단의 서열화를 구조화한 위계, 셋째, 수요와 공급, 필요와 욕구에 의한 시장원리가 시장주체 뿐 아니라 계획주체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 프랙탈 현상이다.

V. 시장의 충격과 회복: 자기조직화 III국면

이 시기 북한정권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 및 공격을 단행하다, 2009년부터 종합시장의 농민시장으로 전환 시도, 150일·100일 전투를 통한 계획주체 및 계획경제의 동력 재구축, 11월 말~12월 화폐개혁 및 외화사용 금지조치, 종합시장 폐쇄조치 등 대대적인 반(反)시장 조치로 시장을 쇼크상태로 몰아넣었다. 시장시스템을 해체하려는 부정피드백이 활발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배급제와 중앙관리에 기반한 계획시스템은 복구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1월을 기점으로 시장시스템의 말단 행위자로서 하루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하층민의 생계위기가 각 지역에서 상소되고, 화폐개혁과 외화조치 등의 실패가 드러났다. 그 후 2010년 9월 현재까지 시장시스템이 회복기에 들어섰으나 아직 계획시스템도 시장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정권의 통제에 대한 시장의 반격이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 경제시스템 작동이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양상인 체계의 비평형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17) 장○○. 40대 여성. 평양-무산-함흥-청진을 다니며 원유 차판 장사. 2007년 탈북.

1. 시장 하락기(2007~2010. 1): 부정피드백

이 시기는 북한 경제시스템 내 한 축으로 작동되던 시장시스템의 쇼크기이다. 시장시스템으로부터 창발된 다양한 비사회주의 현상이 국가와 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김정일 정권이, 첫째, 시장시스템 작동의 상징적 공간인 종합시장을 '비사회주의 서식장'으로 규정하고 통제 및 폐쇄 조치를 취하고, 둘째, 과거 계획시스템 내 농민시장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 및 강제를 했으며, 셋째, 상품·화폐·가격구조의 시장경제 허용조치를 폐지했고, 넷째, 계획시스템 작동의 결정적 요인인 전면적 배급제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다섯째, 화폐교환·외화사용 통제 등을 조치하였다. 북한 경제시스템에 부정피드백이 활발하고 공격적으로 작용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2010년 1월 말부터 시장을 매개로 하루별이 생존을 유지하던 하층민들의 생계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시장주체들의 새로운 창발과 긍정피드백이 시작되었다.

시장에 대한 공격의 상징은 2007년 4월 시장경제의 제도화를 주도했던 박봉주 총리가 숙청되고 김영일이 신임 총리로 임명되며, 2007년 10월 장성택이 중앙당 행정부장에 임명된 것이다. 2007년부터 북한 경제주체들의 시장원리를 통한 활동을 금지시키고, 소토지 경작에 대한 억제정책이 시작되었다. 개인들이 일구고 있는 뚝배기, 텃밭 등 소토지를 모두 집단농장으로 환원하라는 지침이 시행되었다. “사회가 무질서하고 규율이 없으면 어떤 도깨비가 나올지 모른다”¹⁸⁾는 인식에 따른 중앙 계획주체의 행위들이다.

그리고 비사회주의 서식장이라 명명한 시장과 시장의 행위주체에 대한 공격으로서 '비사회주의 검열'이, 다양한 주체와 기관이 단독 또는 연합그루뵌을 형성하여 단행되는 등 2007년부터 강화되었다. 2008년의 주요 특징으로 하급단위의 군부 무역회사를 비롯하여, 국경연선에서의 각종 무역회사에 대한 검열이 강력하게 진행된 것이다.¹⁹⁾ 시장시스템에 대

18) 군중강연자료.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07. 10)”; 『産經新聞』, 2007/11/13(한기법 2009, 134; 149에서 재인용).

19) 2007년 12월 23일 김정일의 방침에 따르면, 군부대 명칭으로 된 무역회사들과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역회사들을 일체 재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1일 중앙당과 내각은 “모든 군부대들에서 군부출장소와 군부 산하 외화별이 회사를 없애고 강성무역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기구를 줄여야 하며, 지방에서는 군부보다 당 기관을 우선 내세워야 한다”는 방침을 하달했다(박형중 외 2009, 36).

한 공격은 국영상업망의 강화를 통한 시장억제 및 노동자의 공장복귀를 유도하다,²⁰⁾ 2009년 말 시장폐쇄 조치로 이어졌다(좋은벗들 2007~2009년 각 호).

종합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북한정권의 본격적 시장통제는 2007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 10월 중앙당 차원에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통제방향에 대한 사상 교양사업이 전개되었다. 당시 중앙 계획주체들이 북한 내 최대 도매 시장이라는 평성 종합시장 등 주요 도시들의 시장실태를 조사한 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것은 첫째, 시장의 번창과 시장경제 활동의 외부로 확대, 둘째, 청장년 층 특히 여성들 대부분이 시장에 나와 장사하는 것, 셋째, 상인들이 폭리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 넷째, 한국상품을 통해 “적들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는 것,²¹⁾ 다섯째, 북한사회에 배금풍조·부정부패·빈부격차 심화 등이다. 이러한 근거로 단행된 시장에 대한 공격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2007년 10월부터 불법·무질서 거래 통제, 2008년 10월부터 개장일·판매품목 통제, 2009년 6월부터 시장 공간 자체에 대한 물리적 축소이다(한기범 2009, 206-207).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2009년 12월 단행된 화폐개혁 전후로 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정권은 시장을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폐교환을 단행한 이후 지역별로 장마당을 폐쇄하거나 장사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기도 했다. 화폐개혁 직후인 12월 28일 인민보안부 명의로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민간·기업·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화 사용을 전면금지한다는 외화사용 금지와 이 조치 전후로 실시한 민간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 환수조치까지 내려졌다.

계획경제를 보조하며 가격을 안정화하고 군수 및 당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하부단위 자력경쟁 제도로 부분 인정한 시장경제가 계획경제 내부로 침투하고, 계획주체들의 행위양식도 시장시스템에 종속되면서 국영유통망을 잠식할 뿐 아니라, 정권의 계획 우위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경계가 단속이 너무 심했어요...검열이 정말 수시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는

20) 이러한 정책의 기본인식은 2002년 7·1 조치의 초기정책 및 2005년 10월 식량국가전매제 등에서 드러난 정책방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박형중 외 2009, 36-49).

21) 한국과 자본주의에 대한 정보순환과 함께 스며드는 동경, 환상, 기대 등등.

당연히 없는 거고, 몰래...어쨌든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²²⁾

7·1 조치 이후 북한주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사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1월까지 진행된 북한의 화폐개혁과 시장폐쇄, 배급제 재개, 외화사용 금지 조치 등이다. 2010년 2월 이후 북한정권이 화폐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외화사용도 인정하며, 다시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당시 화폐개혁과 시장폐쇄로 인한 중하층민들, 특히 시장에서 하루벌이를 하던 하층민들의 생활고와 그 여파가 9월 현재까지 북한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에 가족이 있어 아직도 전화로 북한 상황을 자주 접하는 한 탈북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다 뺏겼잖아요, 화폐교환해가지고 그 일일장사 하던 사람들, 그 본금을 다 뺏겨가지고 그 돈 이제 무용지물로 쓰지 못하게 되니까, 하룻밤, 화폐교환 끝에 길거리엔 돈이 뿌려져 있더라요. 그 돈이 무효됐으니까요. 대다수가 그게 많은 거 같아요.”²³⁾

한편 계획주체들의 시장시스템 공격에 대해 북한의 시장주체들은 다양한 창발 행위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09년 북한정권의 시장 통제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창발 현상을 보이곤 했다. 첫째, 운영시간 및 장사 단속에 대응해서는 종합시장 밖으로 이동하여 골목장사나 손수레 장사·메뚜기 장사를 하며 시장행위를 지속하였고, 둘째, 장사물품 단속에 대응해서는 물건품목을 적은 표지판 등을 들고 손님을 유인하여 가정집에서 판매를 하였으며, 셋째, 장사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를 대동하고 장사를 하거나 나이든 여성과 동업을 하거나 하며 계획시스템과 조율하였다. 이에 따라 메뚜기 장사·방문판매가 성행하였고, 청진시 여성상인들은 집단적인 항의를 하였으며, 시장 단속 일꾼들과 마찰이 급증대하고 국경연선지역 여성 일부는 엄중한 감시망에서도 탈북을 시도하곤 하였다(좋은벗들 2009/10/13).

2. 회복기(2010. 2~현재): 비평형성

이 시기 북한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급증대하는 복잡계의 비평형성이 높아져 자기조

22) 한○○. 40대 여성. 평양-함북 은성. 기술준비원 출신. 2008년 탈북.

23) 정○○. 30대 여성. 함북 무산, 교환수 출신. 2007년 탈북.

직화 III국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권의 각종 시장통제 정책은 단행되었으나, 배급재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장을 매개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북한 하층민들의 생계위기가 드러나면서 각종 통제조치의 비실효성이 증명되고 있다. 이를 시장시스템의 계획시스템에 대한 반격기라 칭할 수 있겠다.

북한정권이 2009년 말부터 강제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외화조치 실패가 드러났고, 배급제 재개 약속이 폐기되었다. 하루벌이 하층민 생계위기와 시장개방 요구가 증대되면서 각 지역별로 시장운영이 묵인되었다. 급기야 박남기와 김영일 등 시장통제를 주도한 계획주체 중 최상층의 수뇌부들이 숙청되는 등의 권력변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5월 26일 중앙당에 의해 전방위적인 시장활동 재개 조치가 하달되었다. 아래로부터 시장주체의 측면에서는 메뚜기시장과 가정방문 암시장을 주도한 가게와 시장 행위자들의 상품축적 효과가 발휘된 시기이다.

그러나 국가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물가는 다시 폭등하고 주민들의 생활고,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하루벌이를 하던 하층민들의 생활수준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북한정권은 지역단위에서 개폐를 반복하던 시장행위를 묵인하다 다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시스템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는데, 북한당국이 이를 간과한 채 급격한 반시장 정책을 단행하다보니 후유증만 남겼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다시 정책 실효성 문제가 평가되었다. 외화사용 금지 및 이 조치 전후로 실시한 민간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 환수조치 또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 계획주체들이 외화사용 금지조치를 발표하며 주민들에게 달려당 신권 30원(구권 3,000원)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에 응한 주민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이 문제는 중하층의 계획주체들이 이미 시장시스템에 들어와 상호작용하는 관성이 자리 잡힌 상태에서, 중앙 계획주체에게 정치적 부담이 큰 조치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민간 중 상당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돈주들의 경우, 북한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수단 등을 통해서 외화를 강제 몰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층과 결탁하고 있어 정권 상층부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결단이 아니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화환수와 관련해 북한당국이 주목한 것은 민간 보단 기관 및 기업소일 수 있다. 국가소속인 기관과 기업소는 국가명명이라는 방법을 통해 외화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수경제 및 당·김일성가계 자금원인 특수경제 소속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들에 대해 내각이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 2월 북한당국은 외화사용 금지조치

를 반복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외화사용 금지조치가 가져온 환율폭등과 물가폭등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다(임수호 2010, 7).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이미 북한의 광범위한 계획주체와 군·특수경제의 행위 역시 시장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작용 없이 운영할 수 없었던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의 급격하고 강제적인 시장폐쇄와 화폐개혁,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고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달러나 중국돈 등 외화에 대한 가치와 보유 욕구는 더욱 증가했다.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각 기관 및 기업 수준의 재정관리 주체들도 유사하다. 따라서 시장주체의 필요 및 수요와 공급 난항은 결국 20여 년 이상 자기조직화를 통해 진화하고 있는 시장시스템의 비가역성을 보여준 것이다.

중앙 계획주체들에 의한 자기 평가는 2010년 1월 31일 김영일 내각 총리가 내각회의에서 "(식량문제는) 3개월만 기다려 달라"며 사과문을 발표한 것(좋은벗들 2010/06/14)과, 이어 김영일 총리와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의 경질로 나타났다. 1월 말부터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통제로 식량과 생필품을 수급할 수 없었던 하루벌이 하층민들의 생존위협에 따른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며 지역에서 임의로 일정시기 시장을 개방하다, 2월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임시 허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좋은벗들 2010/02/02). 화폐개혁 실시 2개월 정도 지난 2010년 2월 이후 지역단위에서 시장이 암묵적으로 허용된다.

전체적으로 화폐개혁과 시장통제 이후 굶주리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계획주체들에 의한 시장통제 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2010년 4월 접경지역 각 기관들에까지 "화폐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고난"을 만든 "박남기 죄행"에 대한 당원·근로자 강연제강을 가지고 시, 군당 조직지도부 담당부원들이 대대적인 주민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당 계획재정부 부장이었던 박남기의 잘못으로 화폐개혁이 벌어지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고난이 발생하였다. 박남기는 대내 잠복 간첩이었다"는 것이다(리정순·최진이 2010, 146).

그러나 공격적인 부정피드백의 여파로 북한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화폐개혁 이전 수준만큼 시장시스템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거래 물량이 화폐개혁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온성 시장은 남한 시장처럼 활기가 넘쳤지만 2010년 3월 현재 몇몇 상인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2009년 10월 식량·옷·신발·기름·낙지 등 없는 게 없어 보이던 상점 진열대에는 화폐개혁 석 달 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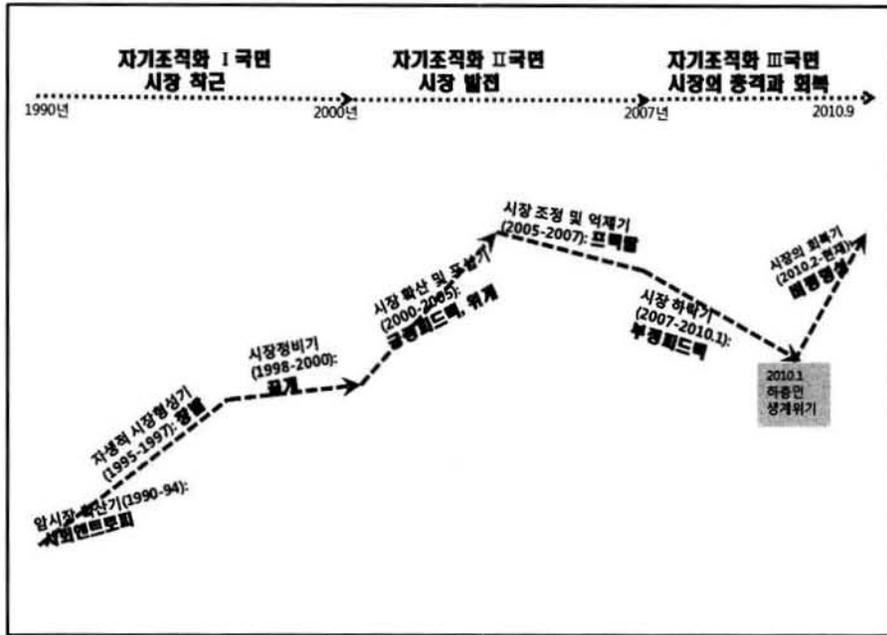
옥수수 1~2포대 정도만 올라와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0/04/21).

또한 북한주민들은 종합시장인 공식시장에서의 거래보다 암시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공식시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당국에서 불시에 압수해 갈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공식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뚜기시장이라 불리는 암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암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품들은 사적 경작물과 각종 가내부업의 생산물, 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에서 절취한 제품/원료 등 각종 물자, 지역별 특산물, 국영 및 외화상점에서 권력층이 싼값으로 구입하여 유통시킨 물건,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건 등 여전히 다양하다. 물론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이 공장 과 기업소에 화폐교환을 해주지 않아, 공장 가동률이 더욱 떨어지면서 생산이 제대로 안되어 시장에 공급되는 물건도 대폭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장시스템은 여전히 개인 뿐 아니라 기업수준에서의 경제활동에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격은 결국, 2010년 5월 26일 북한 중앙당의 “어려워진 식량 사정으로 국가에서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됐다”는 발표를 이끌어 내었고, 내각과 각 부분들도 국가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시문을 각 산하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일명 5·26 조치로 명명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후퇴선언은 내각 산하 무역성, 각 공업성과 보안성, 보위부 등에 무역회사 등 시장행위 주체들의 활동보장과 주민생계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세부지침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을 옥죄던 모든 규제가 풀어졌다고 한다. 장사도 24시간 허용되며 금지품목 제한도 없어졌다. 2007년부터 강력하게 통제해 온 상인나이 제한(49세 이하)도 함께 풀렸다. 2009년 시장활성화의 주요 장소로 지목되어 가장 먼저 폐쇄됐던 평성시장에는 “모든 규제를 취소하고 장사를 풀라”는 지시가 하달됐고,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시장 책임비서가 직접 나서 그동안 축소시켰던 장마당 용지를 다시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좋은벗들 2010/06/14).

그리고 지난 7월 5일, 내각 간부들의 경제 실무회의가 5·26 당지시 이후 7번째로 개최되어, 주민들의 생활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공업과 지방 산업을 육성해야 인민소비품이 충분히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들을 집중 생산하자는 논의들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현재 생필품의 8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산 비중을 높이려면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부터 집중 생산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좋은벗들 2010/07/28). 이러한 회의내용들은 유통부분에서 뿐 아니라 생산부분에서 북한의 시장시스템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모든 시스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자기생산(autopoiesis)’이기에,



〈그림 1〉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생산의 과정(process)이 중요하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행위와 활동은 스스로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자가 어떤 형태든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조직화를 해야 한다(Maturana and Varela 1980). 또한 한 시스템의 자기조직적 특성을 이해하려면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며, 타 행위자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즉, 다른 행위자들의 자기유지 활동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Morgan 1986).

2010년 9월 현재 북한 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계획주체들은 다시 시장시스템의 필요를 인정하였다. 한편 시장주체들은 수축된 시장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요동과 북한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태이다. 즉, 현재 북한 경제시스템은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인 비평형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매우 작은 요동이 점차 증폭되어 거대한 흐름으로 드러날 수 있다. 불안정성이 일정한 분기점에 달하게 되면 시스템이 우연히 새로운 경로를 찾아 자기조직화를 해나가기 때문이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북한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의 복잡

계 현상을 그림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2010년 9월 현재까지 20여년의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사회엔트로피, 창발, 끌개, 위계, 긍정피드백, 부정피드백, 프랙탈, 비평형성 등의 복잡계 현상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복잡계 현상은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에 따라 <그림 1>처럼 범주화할 수 있다. 그러나 2장의 각각의 개념과 분석방법에서 설명하였듯, 이들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나타난 복잡계 현상들은 공존하거나, 질서와 무질서의 동시적 양상으로 혼재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등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즉, 시간적 순서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동시성과 중첩성을 갖는다.

VI. 결론

본문에서는 첫째, 북한 경제시스템에 시장질서가 착근하게 된 자기조직화 I국면을 다루었다. 1990~2000년 기간인 이 시기 대표적 복잡계 현상은 사회엔트로피, 창발, 끌개이다. 둘째, 시장이 발전하여 북한 경제시스템의 한 축으로 작동하게 된 자기조직화 II국면을 다루었다. 2000~2007년 기간 긍정피드백, 위계, 프랙탈이 대표적 복잡계 현상으로 드러났다. 셋째, 계획주체에 의해 시장시스템이 충격을 받다 회복기로 접어든 자기조직화 III국면을 다루었다. 2007~2010년 현재까지인 이 시기 북한 경제시스템에 시장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부정피드백이 공격적으로 작용하다, 경제시스템의 비평형성이 두드러짐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 복잡계 현상들은 연속성이 아니라 동시성과 중첩성을 갖는다.

시장은 개성의 기초이며 전제조건이고, '자립'과 '자유'를 가치로서 규정한다. 시장의 확대는 여러 재화와 서비스를 금전적인 거래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역으로 돈만 있으면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다. 결국 "타인으로부터의 강요를 거부하는" 자유에는 생활의 자립이라는 현실조건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리고 그 조건을 실현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시장'의 확대는 결정적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오니시 히로시 1999, 121-122).

이런 의미에서 20여 년에 걸친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볼 때,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20여 년 전의 계획시스템으로 복귀될 순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시장시스템으로의 전환 경로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북한 경제시스템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계획과 시장 경제가 공존하면서도, 군수·당 경제는 계획, 인민경제는 시장이라는 이중경제의 일정한 패턴을 유

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우선순위를 유지하던 계획경제 부문에 중하층 분야로부터 시장 질서가 침투하면서 이중경제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던 경제시스템의 질서와 무질서 양상이 동시에 확산되며, 과거의 질서가 요동치며 혼돈상태가 진전되고 있다. 계획시스템의 비효율성 대(對) 시장시스템의 확산, 계획주체의 대중동원 대 시장주체의 자발성, 공적 부조의 결여 대 사적 부조 강화, 지배담론의 지속 대 신념의 변화 등이 북한 경제시스템에서 시장의 자기조직화를 추동하고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요동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며 그 시스템의 생존력을 낮춘다. 북한 경제시스템은 계획과 시장이라는 체계의 이원적 작동과 다양한 혼돈으로 나타나는 하위 체계들 사이의 부조화와 무질서로 평형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시스템의 질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복잡계에서 시스템은 대개 평형상태, 평형에 가까운 상태, 평형에서 먼 상태, 비평형 상태라는 4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새로운 질서로의 창발이 일어나기 용이한 상태는 '평형에서 먼 상태', 완전한 혼돈도 아니고 완전한 질서도 아닌 상태이다. 질서와 무질서가 상호작용하며 시스템 전체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태, 즉 '혼돈의 가장자리'이다. 2010년 현재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평형에서 먼 상태'이며, 자기조직화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 시기 북한 내부의 행위자와 외부 환경의 우연적 요소, 또는 우연한 경로에 의한 상호작용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창발을 추동할 수 있다.

투고일 2010년 7월 30일

심사일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30일

참고문헌

- 권영경. 2010. "2012년 체제" 구축전략과 북한경제의 변화." 『북한경제리뷰』 3월호.
- 김병연. 2009. "북한경제의 시장화." 윤영관·양운철 편집(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서울: 한울.
- 김용운. 1999. 『카오스의 날갯짓』, 서울: 김영사.
- 김용운·김용국. 1992. 『프랙탈: 혼돈속의 질서』, 서울: 동아출판사.
- 김창욱. 2009.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이석·김창욱·양문수·

- 이석기·김은영 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6-03. 서울: 통일연구원.
- 리정순·최진이. 2010. “2010년 4월 접경일지.” 『임진강』 8호.
- 민병원. 2006.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 박영자. 2009.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43집 3호.
- 박형중·조한범·장용석. 2009.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 복잡계 네트워크(민병원·김창욱 편). 2006. 『복잡계 워크숍』,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 연구소. 1985. 『경제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심광현. 2005. 『프랙탈』, 서울: 현실문화연구.
- 양문수. 2005.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2권 2호.
- _____.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 양창삼. 1997. 『조직혁신과 창조적 경영』, 서울: 민영사.
- 오니시 히로시(大西廣) 저. 조용래 역. 1999.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광모·장순희. 2004. “복잡성이론의 적실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권 1호.
-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 2009.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6-03. 서울: 통일연구원.
- 이영훈. 2005. “농민시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경제』, 서울: 한올.
- 이정철. 2010. “북한의 경제법제와 거시경제정책의 이중성: 중국과 베트남 경제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권 1호.
- 임강택·이석기·이영훈·임을출. 2009. 『2009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0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 임수호. 2010.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대내경제전략.” 『북한경제리뷰』 3월호.
- 임진강 출판사. 『임진강』, 2007~2010년 현재 각 호.
- 정명호·장승권. 1997. “경영의 복잡성과 복잡성의 경영.” 삼성경제연구소 편. 『복잡성 과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정은이. 2010. “북한에서 시장의 발전 동인에 관한 연구.” 『한반도의 장벽을 넘어』, 2010 통일학연구원 봄 학술회의 자료집(2010. 6. 9). 서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2008.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6~2010년 현재 각 호.

- 차문석. 2007.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 201』 10권 2호.
- 최진욱·김국신·박형중·전현준·조정아·차문석·현성일. 2008.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서울: 통일연구원.
- 최창현. 1999. "복잡성이론의 조직관리적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보』 33권 4호.
- _____. 2006. "복잡계와 행정조직." 복잡계 네트워크(민병원·김창욱 편). 『복잡계 워크숍』.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한기범. 2009.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마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Bailey, Kenneth D. 저. 이용필 역. 1996. 『사회엔트로피 이론』. 서울: 신유문화사.
- Capra, F. 저. 김용정·김동광 역. 1998. 『생명의 그물』. 서울: 범양사출판부.
- Freedman, D. Is Management Still a Science?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26-38.
- Gaddis, John Lewis 저. 강규형 역. 2004. 『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 Garcia, E. A. 저. 최창현 역. 1997. "조직연구에서 복잡 적응 시스템의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편. 『복잡성 과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Jantsch, E. 1980. *The Self-organizing Universe: Scientific and Human Implications of the Emerging Paradigm of Evolution*. New York: Pergamon Press.
- Lindblom, Charles E. 저. 한성석 역. 2009. 『시장체제: 시장체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 Maturana, H. and Varela, F. 1980. *Autopoiesis and Cognition*. Dordrecht, Holland: Reidel.
- Miller, John H. and Scott E. Page. 2007. *Complex Adaptive Systems: An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Models of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Morgan, G. 1986. *Images of Organiz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Parker, D. and Stacey, R. 1994. *Chaos, Management and Economics: The Implications of Non-Linear Thinking*.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Prigogine, I. and Stengers, I. 1984. *Order Out of Chaos: Man's New Dialogue with Nature*. New York: Bantam Books.
- _____. 1989. 신국조 역.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서울: 정음사.
- Wikipedia. 2010.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q=Santa+Fe+Institute (검색일: 2010. 6. 3). (1/100Bar).
- Wikipedia.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5XXX13298> (검색일: 2010. 7. 5). (1/20Bar).
- Wikipedia.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XX370> (검색일: 2010.

6. 10). (1/40Bar).
- Wikipedia.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20XX191094> (검색일: 2010. 6. 1). (1/10 bar).
- Wikipedia.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20XX286947> (검색일: 2010. 6. 5). (1/40Bar).
- Wikipedia.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20XXX13998> (검색일: 2010. 5. 2). (1/50Bar).
- Wikipedia.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20XXX28782> (검색일: 2010. 5. 3). (1/50Bar).
- 브리태니커.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1g3139a> (검색일: 2010. 7. 29). (1/30Bar).
- 브리태니커.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5a3168b002> (검색일: 2010. 7. 26). (1/30Bar).
- 브리태니커.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5a2575a> (검색일: 2010. 5. 2). (1/10Bar).
- 브리태니커.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3s2128a> (검색일: 2010. 8. 19). (1/10Bar).
- 위키백과.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33807> (검색일: 2010. 7. 5). (1/40Bar).
- 위키백과. 201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X7359> (검색일: 2010. 6. 4). (1/100Bar).

ABSTRACT

The Status quo of Complexity on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The Path of Self-Organization on Market Economy

Young Ja Park | Ehw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tus quo of complexity on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This study, especially, centers upon the path of self-organization on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Chapter 2 deals with complexity theory, the fundamental notions of analysis and the analysis methodology basing on office agent-based model on the history of agents and their interactions. Chapter 3 seeks to estimate the first phase of self-organization as formation times of market economy from below in North Korea; 1990~2000. The main status quo of complexity in this period are social entropy, emergence, attractor. Chapter 4 examines the second phase of self-organization as development times of market economy; 2000~2007. The main status quo of complexity in this period are positive feedback, hierarchy and fractal. Chapter 5 analyzes the third phase of self-organization as decline and reaction times of market economy; 2007~2010. The main status quo of complexity in this period are negative feedback, non-linearity. These status quo shows simultaneity and reiteration.

Keywords: economic system of North Korea, complexity, office agent-based model, dual economy of planned and market, path of self-organization